

# 내년 도내 학부모 부담 줄어든다

전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조례안·교복비 등 지원 조례안 등 도의회 본회의 통과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대상 학부모 부담 35억원 경감 예상·교복비 지원 모든 학생 확대

내년부터 전북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부담 자체수입으로, 분기별 학생 1인당 5만 400원에서 5만1,600원(연 20만1,600원~21만8,4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공·사립 전체 고등학교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와 수업료 자율고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고교 신입생 1만7820여 명이 지원을 받음에 따라 총 35억원의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2020년에는 1~2학년, 2021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및 초·중·고교생 국내수학여행비 지원은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교복비는 내년 중·고교 신입생 3만35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며,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교생 15만1천732명·중학생 20만1천1591명·고등학생 30만1천7820명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총 소요액은 교복비 100억69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111억2820여만원으로 도교육청은 앞으로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새만금 챔버리 서포터 해주실 분?'

전북도민 서포터즈 내달 14일까지 모집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사)2023 새만금세계챔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이사장 김동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챔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참여열기 확산 등을 위해 2023 세계챔버리에 관심있는 도민 서포터즈를 11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세계챔버리 서포터즈는 도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SNS 등으로 챔버리의 다양한 소식을 전파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범도민으로 개척열기 확산 및 챔버리 참여축진의 징검다리 역할을 도모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성 기자

다.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사)범도민지원회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세계스카우트챔버리 정보제공과 활동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복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stee678@korea.kr)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활동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은 사)범도민지원회 사무국(453-8601) 또는 전북도청 세계챔버리추진단(280-3618)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메르스 대응 관계자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세종시 총리세종공관에서 메르스 대응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 靑 "내달 초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본 2만부 배포"

靑와대는 전날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본을 11월 초안으로 2만부 가량 배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책자를 2만부 가량 찍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기획문서다.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에 맞춰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마지막 발간본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된 한반도 정세 상황을 담아 새롭게 발간된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의 상황이 반영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개본의 중점적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충원율 50% 이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57곳, 지역아동에 개방

복지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강화 일환... 전북엔 1곳  
절반 이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내년부터 공무원 자녀가 아닌 지역 아동에게도 정원을 개방해야 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1104곳 가운데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를 기록한 곳은 5% 정도인 57개소다. 복지부는 전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에 입소하는 내년 3월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방 대상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서울 8곳, 부산 2곳, 대구 2곳, 인천 5곳, 광주 4곳, 대전 4곳, 울산 3곳, 경기도 9곳, 강원도 2곳, 충북 1곳, 충남 5곳, 경북 6곳, 경남 3곳, 전북 1곳, 전남 2곳 등이다. 다만 개방 인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통적인 개황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지침상에도 공공기관 직장어

린이집은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 여유가 있을 때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 조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몇 군데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몰모래'로 삼아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곳에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지침상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조항을 개정해 내년도 지침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 1면에 이어... '전주시, 전북 중심 거점도시 청사진 마련'

시는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등 도시공간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중앙) △2부도심(효자, 팔복) △2지역중심(인후, 완산)으로 재편했으며, 개발축은 △기린대로를 활용한 광역 문화관광축 △새만금(군산, 김제)·완주방향 기준의 산업발전축 △전북혁신도시~팔복동산업단지~완주테크노밸리와 연계하는 산업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시가화예정용지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과 전주역 배후지, 경륜장 주변, 장미집행 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향후 도시개발수요에 대처한 7.083㎢를 계획했으며,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연계

를 위한 광역 도로 개설과 새만금 배후도시로의 주요거점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도 연결 등의 도로계획과 자전거도로망 계획이 제시됐다. 시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14일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 및 도 관계기관 협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가 전북 중심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전주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2035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